

#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 연구개발 '열띤 토론'

### 3월 새로운 전북 포럼 개최... 김 지사 등 참석 전문가적 업무 역량강화 · 도정발전 방향 모색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과 토론 등 직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3월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 지사

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실·국장,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200여명과 함께 '한국산업의 성장동력과 주요과제'를 주제로 공부하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는 대응도 빨라야 한

다. 현재의 주력산업을 미래의 주력산업으로 고도화해야 하고, 발전 초기 산업을 미래의 주력산업으로 어떻게 키워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며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전북하면 농업을 떠올리는 일이 많았지만, 전북 경제를 견인할 미래 첨단산업의 동력을 하나씩 갖춰나가고 있다"며, "이차전지에 이어 올해는 바이오, 방산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는 산업연구원 성장동력 산업본부 정은미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응하는 산업 구조 전환 필요성 등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정 본부장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과 대형국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 본부장은 "한국산업은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을 추진한 결과, 높은 제조업 비중을 차지하며 세계 시장에서 규모와 비중에서 위상이 강하지만, 주요 제조국과 비교해 부가가치율은 낮다"며 "질적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하는 산업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새로운 전북포럼에 김관영 도지사과 참석자들이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본부장의 '한국산업의 성장동력과 주요역인'이란 주제의 특강을 듣고 있다.

## 4월부터 '도청사내 1회용품 반입 금지'

### 탄소중립 실현 위해 전북자치도 앞장

전북특별자치도가 청사 전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도청사내 1회용품 반입을 금지한다.

이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의 일환으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이고, 소비문화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금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월 18일부터 2주간 점심시간 동안 도청사 출입구 5개소에 직원들이 1회용품 반입금지 집중홍보 등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본격 시행하는 4월 1일부터 2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청사내 1회용품 반입금지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다회용품 사용 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전면금지(청사카페) △사무실 및 회의실 1회용품 사용 금지 등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도가 직접 선수범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와 함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문화를 정착을 위하여 도를 비롯해 청사 주변 공공기관과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다회용품 순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다회용품 순환 시스템은 고객이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다회용 컵 보증금 1천원을 지불하고, 사용한 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 1,000원 환불과 더불어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간 도는 1회용컵을 줄이고 공유컵 사용을 늘리기 위하여 2019년부터 전주 객리단길을 시작으로 전북대와 원광대 대학로, 남원 시청로까지 4개 거리 50여개 업소가 참여하는 '제로플라스틱 전북'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바로 지금,년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시작으로 도민 모두가 함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임상규 행정부지사, 자활센터 현장방문

### 해피트리브레드 사업단 찾아 간담회 및 의견 청취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21일 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해피트리브레드 사업단 현장을 방문하여 임종원 완주지역자활센터장을 비롯한 자활관계자, 지역주민 3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완주지역자활센터는 2016년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회복지시설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위해 반찬 제조 판매, 카페 등 총 12개의 자활사업단·기업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그중 해피트리브레드 사업단은 2016년부터 초코파이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단으로 6명의 자활 참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7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사업단 현장 및 시설을 둘러본 뒤 지역자활센터 주요사업 및 운영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자활관계자는 "자활 참여자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센터와 자활사업장 환경 개선과 안전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자활근로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현장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의미 있는 자립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권 안에서 수급자 선정과 보호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의 저소득층 관련 정책방향은 자활사업을 통한 자활·자립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활사업단에서 일하는 한 참여자는 "자활참여를 통해 일하는 기쁨과 성취를 배워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지원과 저소득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다양한 자활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재훈 기자

## 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 '꼼꼼한' 대비 나서

### 2025년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신규 5개 지구 발굴

### 민간 전문가 초청 행안부 심사 대비 PPT 발표 · 평가항목 분석

전북특별자치도가 21일 2025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 신규 지구를 발굴해 본격 컨설팅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1일,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신규 5개 지구를 발굴하고 행안부 타당성 평가에 대비한 시군별 사전 컨설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규 지구를 행안부에 제출하기 전에 민간 전문가를 2명 초청해 행안부에 대응하기 위한 선정 심의를 모의 테스트 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컨설팅 회의는 PPT발표, 질의응답, 평가항목 분석 등 시군별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의 장·

단점을 분석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마련됐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단위 사업별로 시행하는 단편적인 재해예방사업에서 벗어나 풍수해로 인한 침수, 붕괴 등의 취약 요인을 마을 단위로 발굴해 재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 하천, 하수도, 배수펌프장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해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도 자체 서류심사와 2차 행안부 서류심사, 3차 발표심사를 거칠 계획으로, 사업비 중 50%를 국비(균특)로 지원해주는 만큼 시도 간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전 컨설팅 지원 후, 국비 확보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인 풍수해 생활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붕괴 위험지역 급경사지 사업 등 내년도 사업을 신규 발굴하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검증 후 행안부에 사업을 3월말에 신청할 계획이다.

운동목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선제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대안위 종합정비인 풍수해 생활권 사업을 도와 시군이 지속 발굴해 태풍 및 집중 강우 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행안부와 기재부 등 신규 및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해 2025년도 풍수해 생활권 5개 지구가 모두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시군별 사전 컨설팅 지원, 심사위원회 등 사업 발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2년 2개, 2023년 3개, 2024년 3개 지구가 행안부로부터 선정됐으며, 2020년부터 시작한 사전컨설팅 지원은 전년까지만 하더라도, 민간 전문가 1명 참여해 사업별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2명으로 확대하여 행안부 최신 트렌드에 맞는 선정 심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